

# 서구 근대 사회운영론의 한계와 儒敎의 名分論에 대한 재조명\*

이 상 익(Lee, Sangik)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서구 근대 사회운영론의 두 유형과 '제3의 길'
  - 1. 자유주의와 경쟁의 논리
  - 2. 사회주의와 형제애
  - 3. 자유주의·사회주의의 딜레마와 '제3의 길'
- III. 전통 유교의 名分論에 대한 재조명
  - 1. 名分論의 이상과 그 운영 원리
  - 2. '제3의 길'로서의 名分論의 의의
- IV. 결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10).

## &lt;논문 요약&gt;

일반적으로 말해, 이기심은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기심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경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자유주의는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만 주목하고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반면, 사회주의는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만 경계하고 긍정적 측면을 간과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양면적인 이기심'에 대한 '일면적 처방'에 치우쳤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에 못지않은 폐단을 야기했던바,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 識者들은 '제3의 길'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유교의 명분론적 사회운영론은 다음의 세 원칙으로 구성된 것이다. '尊賢使能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官職 등의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도덕성과 실무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所享有限의 원칙'은 각자가 누리는 복지의 몫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財貨의 소비는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적 賢能의 원칙'은 명분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파한 것이다. 위의 세 원칙은 '이기심에 대한 양면적 처방'을 피한 것으로, '제3의 길'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자유주의, 사회주의, '제3의 길', 유교, 명분론.

## I. 서론

서구 근대 사회·정치 사상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별되는바, 자유주의는 이기적 경쟁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는 형제애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충실하면 양극화(富益富 貧益貧)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에 충실하면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에 봉착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원적으로 自由와 平等 사이의 길항관계에서 비롯되는바,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서구의 지성들은 그리하여 '제3의 길'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전통 유교의 핵심적인 사회·정치 사상은 名分論이었다. 名分論이란 자신의 '이름(名)'에 따르는 '몫(分)'을 다하지는 것으로서, 공자는 그것을 '正名'이라 하였다.<sup>1)</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명분론은 모든 '이름'에는 고유한 '몫'이 따른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에는 본래 고유한 몫이 있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다하고 타인의 몫을 존중할 때, 서로 '感應'이 이루어져 '生生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유교의 지론이었다.

예컨대 『論語』에서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했는데, '다움'이란 어떤 이름(직책)과 그에 따른 몫(본분)이 서로 부합하는 '正名'을 말한다. 한편 『大學』에서는 "文王은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仁에 머물렀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敬에 머물렀고,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孝에 머물렀고, 남의 부모가 되어서는 慈에 머물렀고, 나라 사람들과 사귄 때에는 信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는 '君·臣·父·子' 등의 이름에 따르는 몫을 '仁·敬·慈·孝'로 해명한 것이다.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공경하며, 부모는 자애하고, 자식은

1)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김갑순·홍길동'과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학생과 선생' 등과 같은 일반명사를 뜻한다. 한편 '몫'은 경우에 따라 '본분'이나 '직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권리와 의무의 몫'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육망의 한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분배의 몫'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효도하여, 모두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운영원리를 도출했거니와, 크게는 『周禮』의 全篇, 작게는 『禮記』의 <王制>篇이 그 綜合版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명분론은 『周易』의 陰陽思想과 표리를 이룬다. 易學에서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天尊地卑)'는 관점에서 '음양의 위계'를 강조하면서도,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 감응하여 서로 이루어준다(相反相成)'는 관점에서 '음양의 감응'을 강조한다.<sup>2)</sup> 음양은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통치자와 피치자,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부모와 자식 등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거니와, 음양의 위계는 각자의 '몫의 차등적 설정'으로 연결되고, 음양의 감응은 '차등의 최소화'로 연결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몫의 차등적 설정'은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고, '차등의 최소화'는 갈등 예방의 계기가 된다.<sup>3)</sup> 명분론은 바로 이러한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다.

유교의 명분론은 사회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논의의 소재를 제공한다. 本考에서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사회운영론을 개관하고, '제3의 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핀 다음, 유교의 명분론적 사회운영원리를 해명하고, 우리의 전통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로서 명분론이 지닌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서구 근대 사회운영론의 두 유형과 '제3의 길'

### 1. 자유주의와 경쟁의 논리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준거로 삼는 이념 체계이다. 자유주의에 있어서 자유는 목적적 의미와 수단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익, 『歷史哲學과 易學思想』, 성균관대출판부, 1996, 123~145쪽 참조.

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周易』의 음양사상은 유교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다. 자유는 그 자체 삶의 최고 목적이요 가치라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에 일임하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에 일임한다는 것은 두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自助의 원칙'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바, 그렇다고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몇 가지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는바, 그것은 둘로 요약된다. 첫째는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無害原則(危害原則)'이며,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公平原則(公正原則)'이다. 이상의 네 원칙은 자유주의 사회운영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침들이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교환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유주의에 입각하면, 개인은 본래 독립적 존재이기에, 사회생활을 영위할 필연적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건설하는 이유는 교환을 통해 각자 서로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무해원칙'과 '공정원칙'은 바로 사회적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칙이었다.<sup>4)</sup>

4) 사회를 '교환의 체계'로 규정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라 한다. 사회교환이론은 현대 서구에서 '사회관계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점'이다. 현대의 사회교환이론은 호만스(G. C. Homans)·티보(J. W. Thibaut)·켈리(H. H. Kelley)·월스터(E. E. Walster)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의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을 '패락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 보는 自由主義 古典經濟學의 전제를 따른 것이다(조공호,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서강대출판부, 2012, 442~444쪽 참조). 조공호는 현대의 사회교환이론이 본질적으로 홉스와 로크 등 자유주의의 사회계약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자세히 규명한 바 있다. 그 대강을 요약하면, 이들은 모두 ①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를 '독립적이고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보고, ② 인간존재의 기본 특성을 '이성을 갖춘 합리적 계산자'로 보며, ③ 사회관계의 목표를 '자기이익의 최대화'로 보고, ④ 사회관계 유지의 규범을 '공정한 교환'으로 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는 본질적으로 '분업과 협동의 체계'이다. 분업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 분업의 결과를 교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교환은 동서고금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인바, 따라서 사회를 '교환의 체계'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만의 독특한 관점이 아니다. 자유주의의 특징은 사회를 '교환의 체계'로 규정함에 있지 않고 '사회적 교환의 본질'을 '자기 이익의 최대화' 즉 '이기적 경쟁'으로 규정함에 있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인간은 본래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라는 인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합리적 이기주의'에서 주목할 것은 '합리적'이라는 용어이다. 이는 '이성을 통해 이기적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뜻으로서, 두 맥락을 포함한다. 첫째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찾아냄으로써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남과의 갈등(투쟁)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합리성(rationality)'은 두 의미를 지닌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效率性'<sup>6)</sup>과 무해원칙과 공평원칙 등 이성이 제시하는 自然法을 준수한다는 '公正性'<sup>7)</sup>이 그것이다.

것이다(『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502~513쪽 참조).

- 5) 갈등(투쟁)은 대개 협력(평화)보다 많은 비용을 초래하므로, 갈등을 피하는 것도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利己主義는 종종 남과의 갈등을 낳는데, 갈등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理性의 역할이다.
- 6) 흄은 "이성은 정열의 노예요, 오직 노예여야만 한다. 이성은 정열에게 시종하며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직분도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L. A. Selby-Big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415쪽), 이는 '가장 효율적으로' 정열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理性의 직분'이라는 의미였다.
- 7) 흄스는 自然法을 '理性이 알려주는 법'으로 정의하고, 자연법의 제1조항은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요, 제2조항은 '나도 남이 누리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Thomas Hobbes, *Leviathan*, Penguin Books, London, 1985, 188~190쪽 참조).

자유주의의 '자유'란 실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이기심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따라서 이기심을 승인하면 각자의 삶이 개선될 것이요, 각자의 삶이 개선되면 결국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지론이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기심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또한 이기심과 동행하는 理性(自然法)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맨더빌(Bernard de Mandeville)은 '私惡이 바뀌어 公益이 된다고 설파하면서 개인이 '正義의 원칙 아래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自由'를 외쳤던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을 正義와 결합시키면 인류의 樂園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맨더빌의 지론이었다.<sup>8)</sup>

맨더빌은 개인의 이기심을 옹호하면서도 정의라는 원칙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기심에 대한 일반적 우려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끌어들이어 이기심에 대한 일말의 우려마저 완전히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의도한 것이고 (...) 오직 자신의 이익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의도했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보다 적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sup>9)</sup>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일치시켜주는 '神的

8) 맨더빌, 최윤재 역, 『물벌의 우화 :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문예출판사, 2011, 120~121쪽 참조.

9) 스미스, 김수행 역, 『國富論』上, 동아출판사, 1993, 434쪽.

存在로서, 스미스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부담이나 책임을 감면시켜준 것이다.<sup>10)</sup> 이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될 뿐, 나머지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豫定調和). 이러한 맥락에서 밀도 ‘상품의 저렴한 가격과 탁월한 품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방법’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완벽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다.<sup>11)</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이기심의 자유로운 충족’은 ‘자유경쟁’과 표리를 이룬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기적 경쟁을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임은 물론, 사회발전의 적극적 계기로 인식했다. 경쟁은 사회적 효율성의 원천이므로,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이기적 경쟁심을 적극 북돋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체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주의·이기주의·탐욕을 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調和와 平和로 이르는 길이다.”<sup>12)</sup>라는 생각, 즉 예정조화설에 근거한 자유경쟁론은 근대 자유주의의 오랜 지론이었다.<sup>13)</sup>

## 2. 사회주의와 형제애

자유주의가 초기 계몽주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사회주의는 후기 계몽주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초기 계몽주의가 합리주의에 기운 것이라면, 후기의 계몽주의는 낭만주의적 요소를 겸한 것이다. 낭만주의와 합리

10) 박순성,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3, 211쪽 참조.

11) John Stuart Mill, *On Liberty*, edited by Elizabeth Rapaport,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Indianapolis, 1979, 94쪽 참조.

12)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Harper & Row, Publishers. 1976, 3쪽.

13)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수의 딜레마’ 이론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각자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근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일반적 전제는 애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이다(엑셀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12, 32쪽 및 291쪽 참조).



주의는 '계몽을 통한 진보'라는 이상을 함께 하지만, 합리주의가 '머리의 지혜'를 강조함에 반하여 낭만주의는 '가슴의 온정'을 강조했다. 요컨대 루소로 대표되는 후기 계몽주의는 '지혜롭고 온정있는 인간상', 즉 '가슴과 머리가 모두 건전한 인간상'을 모색하게 되었다.<sup>14)</sup>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가 모든 문제를 理性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사회주의는 이성의 한계를 溫情(형제애)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노선 차이는 당시의 현안이었던 '貧民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크레인 브린튼은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두 노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대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우선 아래의 인용문은 '머리'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은 救濟 대상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정을 주는 貧民救濟와 慈善事業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며, 심지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맬더스가 1798년에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출판했던 시기의 경제학자들의 논의는 사뭇 원숙하였다. 즉 가난한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되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더 적게 되고, 결국 그들 모두의 형편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다. 功利主義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구제를 받아야만 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性別로 격리하여 아주 형편없는 빈민굴에 수용하는 작업장 제도를 英國에 세우는 데 조력하였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진다면, 만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으면 그들을 굶어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sup>15)</sup>

자유주의(공리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 '빈민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증명'에 입각하여 빈민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6)</sup> 한편, 아래의 인용문은 자유주의의 냉혹

14) 브린튼, 崔明官·朴恩駒 역, 『西洋思想의 歷史』, 을유문화사, 1984, 386쪽 참조.

15) 브린튼, 『서양사상의 역사』, 411쪽.

16)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하면, 貧民에 대한 慈善을 참다운 仁慈心이라고 말

함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그들의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당신네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오. 우리는 당신네들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소. (...)" 이러한 변호는 한정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 心情을 가장 순수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호를 할 때에도, 그 변호는 으레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나아갔다. 즉 가난한 사람도 좋은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은 한 번도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환경주의자의 논법이 그것이다.<sup>17)</sup>

빈민들을 불쌍하다고 느낀 것은 사회주의의 '가슴'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비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빈민들의 불행은 빈민 자신들의 탓이기 전에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라는 논변이 그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의 '개인책임 원칙'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기 전에 '사회의 책임'이라고 인식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근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관건은 '자유경쟁론과 무한소유론'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프랑크푸르트 선언><sup>18)</sup>의 前文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언어를 남용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실제로는 빈민의 불행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베담은 맨더빌의 '私惡이 바뀌어 公益이 된다'는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브로노프스키·매즐리슈, 차하순 역, 『西洋의 知的 傳統』, 흥성사, 1983, 542쪽 참조).

17) 브린튼, 『서양사상의 역사』, 411~412쪽.

18) 195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회 사회주의자 국제연맹(Socialist International) 총회에서 채택된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과제'라는 선언문을 말한다. 이 선언문의 前文 제8조에서는 "공산주의는 그릇되게도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전통

1.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생산과 관련한 사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대다수를 배제시키는 代價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더 우선시 한다. 자본주의는 재산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계급 간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비록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옹분의 생활을 충족시킬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세계인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 왔다. 자본주의는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실업이 없는 계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회불안과 빈부간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주의적 착취에 주로 치우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간, 민족 간의 갈등을 더욱 더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자본가 집단이 과거의 야만주의를 부추겨 그것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형태로 다시 대두하도록 만들었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적인 병폐에 맞서는 저항운동으로서 유럽에서 생겨났다. 자본주의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임금노동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맨 처음에 임금노동자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 후 더욱 더 많은 시민들 — 즉 전문직, 사무직 노동자, 농민, 어민, 수공인, 소매상, 예술인, 과학자 — 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었다.
3.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소수자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경제권력을 전체 민중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함께 일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할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바로 이 때문에 생산을 경제적 자유주의의 놀음에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인의 개성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

---

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라 하여, 소련 등에서 표방한 공산주의를 자신들의 사회주의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비판하였다.

와 계획을 동시에 지지한다.

위의 인용문은 사회주의의 입헌정신을 천명한 것인바, 사회주의가 기존의 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sup>19)</sup>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이미 확보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의료 및 출산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여가의 권리, 노령·불구·실업으로 일할 수 없는 시민이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 어린이가 복지를 받을 권리 및 청년이 자기들의 재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택에 살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방임 경제를 전제하는 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므로,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측면을 개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사회주의자들은 兄弟愛라는 이념 아래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본적 방법을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찾은 것이다.

### 3. 자유주의·사회주의의 딜레마와 '제3의 길'

이상에서 서구 근대의 사회운영론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의 자유경쟁론과 사회주의의 형제애 이념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비판하면서 대결해 왔거니와,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을 '개인(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복지는 '自助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의 공간(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들은 자유경쟁이 보장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저절로 실현되어(예정 조화), 결국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2007, 659쪽 참조.

예정되어 있다던 조화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개인들 사이에는 능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거나, 따라서 경쟁이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유경쟁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개인들 사이에는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산의 차이와 교육의 차이도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도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은 결국 약자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되고 말았거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市場의 실패'로 규정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상호 의존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형제애의 당위성을 도출했다.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처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형제애를 사회권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다. 형제애가 사회권으로 탈바꿈되자, 약자들은 평등하게 복지를 누릴 권리를 지니게 되었고, 사회(국가)는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부자들의 시혜에 속하는 것인지 빈자들의 권리에 속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자. 약자들의 복지가 개선될수록 약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부자들은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시키며, 복지 제공을 위해 비대해진 국가의 기능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편으로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 사회책임의 원칙도 결국 다양한 폐단을 야기하고 말았거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國家의 실패'로 규정했다.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하면 시장의 실패에 빠지고,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하면 국가의 실패에 빠진다는 점은 서양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유래하는바,<sup>20)</sup> 그렇다면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모두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는 학자들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쪽에 매달리지 않고 양자를 조국

20) 자유(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와 평등(기회의 균등/결과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수록 사회적 평등은 약화되고, 사회적 평등을 옹호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마련이다.

하거나 절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되거니와,<sup>21)</sup> 근래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와 『제3의 길』,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의 『자본주의 4.0』 등을 들 수 있다.

기든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sup>22)</sup> 요컨대 기든스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초극’을 표방한 것이다.<sup>23)</sup> 반면에 칼레츠키의 ‘제4세대 자본주의론(자본주의 4.0)’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절충’을 모색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초엽부터 193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고전적 자본주의(제1세대 자본주의)는 성장에 초점을 둔 자유방임주의였던바, 이는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뉴딜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태동하게 한 케인스의 경제학(제2세대 자본주의)은 균등분배에 초점을 둔 수정자본주의였던바, 이는 ‘국가의 실패’로 인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9~1980년 대처-레이건의 정치혁명으로 탄생한 신자유주의(제3세대 자본주의)는 市場을 이상화하고 정부(국가)를 불신하는 것인바, 이는 2007~2009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칼레츠키는 ‘제4세대 자본주의’를 제창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국가와 시장 사이의 새로운 절충(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sup>24)</sup>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분기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이기심’에 대한 처방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기심은 ‘자발성과 역동성’을 낳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한다. 전자는 이기심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

21) 기든스에 의하면, ‘제3의 길’이란 말은 20세기 초에 생겨난 것으로, 1920년대에 우파 집단들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었다가, 그 후로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해 왔다고 한다(기든스, 한상진·박찬욱 공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9, 61쪽 참조).

22) 기든스, 『제3의 길』, 62쪽 참조.

23) 그러나 『제3의 길』의 부제가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든스의 노선도 완전한 ‘초극’이 아니요 ‘절충’에 가까운 것이다.

24) 칼레츠키, 위선주 역, 『자본주의 4.0』, 컬처앤스토리, 2011, 63~78쪽 참조.

런히 노력하며, 때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후자는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종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마침내는 전쟁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이기심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만 주목하고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분히 외면했다.<sup>25)</sup> 그 결과 자유주의는 이기심을 무제한적으로 승인하여<sup>26)</sup> 사회의 역동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이면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만 경계하고 그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분히 외면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는 이기심을 과도하게 배제하여<sup>27)</sup> 일시적으로는 평등한 복지를 실현했으나, 마침내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기심을 무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사회주의는 이기심을 과도하게 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양면적인 이기심'에 대한 '일면적 처방'에 치우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제3의 길'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에 대한 양면적 처방'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의 名分論을 살펴보기로 하자.

### III. 전통 유교의 名分論에 대한 재조명

#### 1. 名分論의 이상과 그 운영 원리

사회운영론이라는 맥락에서 유교의 명분론을 해석하면, 명분론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몫을 그 직책과 위치에 따라 선형적으로 설정하고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이 '安分知足의 삶'을 누리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sup>28)</sup> 구

25)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는 데 일조한 것이 바로 '예정조화설'이다.

26) 로크의 '無限所有論'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7) 사회주의자들이 金科玉條로 삼는 '사회적 소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원들이 안분지족의 삶을 누리다면, 그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장구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이러한 생각은 『禮記』 <王制>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王制>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王者가 爵祿을 제정함에 公·侯·伯·子·男의 다섯 등급이 있다. (….) 天子가 관할하는 경작지는 四方千里, 公·侯가 관할하는 경작지는 사방 100리, 伯은 사방 70리, 子·男은 사방 50리이다. (….) 農夫의 경작지는 百畝이다. 百畝를 분배받으면, 上農夫는 9명을 부양하고, 그 다음은 8명, 그 다음은 7명, 그 다음은 6명, 下農夫는 5명을 부양한다.<sup>28)</sup> 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의 祿은 이에 준하여 차등을 둔다.<sup>30)</sup>

위의 인용문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신분 또는 계급)에 따른 財貨의 분배 몫을 설명한 것이다. 명분론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高·下에 따라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재화의 몫도 차등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天子는 7월 만에 殯所를 차리고 7월 만에 埋葬하며, 諸侯는 5월 만에 빈소를 차리고 5월 만에 매장하며, 大夫·士·庶人은 3일 만에 빈소를 차리고 3월 만에 매장한다. (….) 天子는 七廟이니, 三昭·三穆과 太祖의 廟를 합쳐서 七廟이다.<sup>31)</sup> 諸侯는 五廟이니 二昭·二穆과 太祖의 廟를 합쳐서 五廟이다. 大夫는 三廟이니, 一昭·一穆과 太祖의 廟를 합쳐서 三廟이다. 士는 一廟이고, 庶人은 正寢에서 제사지낸다.<sup>32)</sup>

28) 이는 자유주의에서 경쟁의 결과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과 대조된다.

29) 가장 비옥한 田地를 분배받아서 경작하는 농부를 '上農夫'라 하고, 가장 메마른 田地를 경작하는 농부를 '下農夫'라 했다.

30) 『禮記』 <王制>.

31) 宗廟(또는 家廟)에 神主를 모실 때, 太祖(始祖)를 중앙에 모시고, 그 자손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차례대로 배치하는데, 왼쪽을 '昭', 오른쪽을 '穆'이라 한다. 天子의 宗廟에서는 昭에 3대, 穆에 3대, 중앙의 太祖를 합쳐서 7묘가 되고, 諸侯의 宗廟에서는 昭에 2대, 穆에 2대, 중앙의 太祖를 합쳐서 5묘가 된다.

32) 『禮記』 <王制>.



위의 인용문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喪禮·祭禮 등 儀禮의 격식에도 차등을 두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명분론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高·下에 따라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각종 의례의 격식도 차등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무릇 老人을 봉양함에 (….) 50세가 된 노인에게는 鄉學에서 養老의 禮를 행하고, 60세가 된 노인에게는 小學에서 養老의 禮를 행하며, 70세가 된 노인에게는 大學에서 養老의 禮를 행한다. (….) 50세가 되면 糧食을 젊은 사람과 달리 하고, 60세가 되면 이틀마다 고기를 준비해 두며, 70세가 되면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 두 가지를 먹고, 80세가 되면 항상 珍味를 먹는다. 90세가 되면 寢所에 항상 음식을 갖추어 두고, 가는 곳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따라다녀야 한다.<sup>33)</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 첫째는 사생활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세세한 영역까지 명분론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유교에서는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나이도 차등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高·下에 따라 각자가 누릴 수 있는 財貨의 몫도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각종 儀禮의 격식도 차등적으로 설정했으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세세한 영역까지 명분론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교의 명분론은 오늘날 우리가 숭상하는 自由와 平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에서는 왜 이러한 논리를 고안해낸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周易』의 陰陽思想에 내포된 유교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한다.

『周易』履卦의 象辭에서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연못이 있는 것이 履卦이니, 君子는 이를 본받아 上·下를 분별하고 백성의 心志를 안정시킨다(上天下澤 履 君子以 辯上下 定民志)”고 했는데, 이에 대해 程伊川은 다음과 같이 해설한 바 있다.

33) 『禮記』 <王制>.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이 上·下의 바른 이치이다. 사람의 실천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그러므로 그 모습을 취해서 履卦가 된 것이다. 君子는 履卦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 上·下의 名分을 변별하고, 백성의 心志를 안정시킨다. 무릇 上·下의 名分이 분명한 다음에야 백성의 心志가 안정되고, 백성의 心志가 안정된 다음에야 정치를 말할 수 있으니, 백성의 心志가 안정되지 않으면 天下를 다스릴 수 없다.

옛날에는 公卿大夫 이하 모든 지위가 각각 그 德에 알맞았으니, 종신토록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분수를 얻은 것이다. 지위가 德에 걸맞지 않으면 임금이 들어서 승진시켰으며, 士는 학문을 닦아서, 학문이 지극해지면 임금이 (벼슬자리에 나올 것을) 요청했으니, 모두 자기에게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었다. 農工商賈는 각각 자신의 일에 힘쓰되, 누리는 것에는 分限이 있었으니(所享有限), 그러므로 모두 정해진 뜻이 있어서 天下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後世에는 일반 선비로부터 公卿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尊榮에 뜻을 두고, 農工商賈는 날마다 富侈에 뜻을 두어, 億兆의 마음이 서로 이익을 두고 경쟁하여 天下가 어지러우니,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겠는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해도 어려우니, 이는 上·下에 일정한 心志가 없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君子는 履卦의 모습을 보고 上·下를 변별하여, 각각 그 분수에 합당하게 하여, 백성의 心志를 안정시키는 것이다.<sup>34)</sup>

위의 첫째 문단은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해 '上·下의 위계'를 강조하고, 그에 입각해 명분론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 몸의 두뇌와 수족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유기체는 각 부분들의 상호의존적 구조인 동시에 상하의 위계구조이다. 유기체의 각 부분들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각 부분들은 독자적인 권리나 自由를 주장할 수 없고 항상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또 유기체의 각 부분 사이에는 분명히 위계가 있으므로,<sup>35)</sup> 平等이라는 명목으로 그 위계질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위

34) 『周易傳義大全』履卦象辭, 程傳.

35) 인간의 몸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頭腦이고, 그 다음은 五臟六腑이며, 그 다음은 四肢일 것이다. 또 오장육부는 자율적으로 운동한다 하더라도, 사지는 두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서로 의존적 관계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한 위계의 차등이 있는

계 관계가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 위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점들을 수궁한다면 마침내 安分知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이천은 “上·下의 名分이 분명한 다음에야 백성의 心志가 안정된다”고 설파하고, “백성의 心志가 안정되지 않으면 天下를 다스릴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위의 둘째 문단은 명분론적 사회운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그를 미화한 것이며, 셋째 문단은 이기적 경쟁의 폐해를 설명함으로써 명분론의 의의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제 위의 둘째 문단을 중심으로 명분론적 사회운영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둘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公職 생활을 지향하는 士大夫 계급의 경우, ① 차등 대우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지위(직책)는 덕망과 학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② 각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기필하지 않으나, ③ 통치자는 각자의 덕망과 학식에 합당한 지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財貨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農工商賈의 경우, ④ 각자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되, ⑤ 각자가 누리는 몫은 역시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所享有限의 원칙).

위의 내용 가운데 士大夫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음미해 보자. ①의 ‘차등 대우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지위는 덕망과 학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유가의 오랜 지론으로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德이 學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②의 ‘각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기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분사회에 요청되는 개인의 마음가짐을 설명한 것이다. 각자는 항상 자신의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특정한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의 ‘통치자는 각자의 덕망과 학식에 합당한 지위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 역시 유가의 오랜 지론으로서, 맹자는 이를 ‘賢者를 높이고, 能力者를 임용함<sup>36)</sup>이

것이다.

36) 『孟子』 公孫丑上 5.

라는 말로 표현했다(尊賢使能의 원칙).

위의 내용의 핵심은 士大夫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통치자는 각자의 덕망과 학식에 합당한 지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요컨대 '모든 公職은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sup>37)</sup> 개인은 그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통치자는 각자의 덕량에 맞는 지위를 맡긴다는 것이다.

위의 '尊賢使能의 원칙'은 부분적으로는 경쟁론의 요소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개인이 최선을 다하면,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지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②의 '각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기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개인은 그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뿐 경쟁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요컨대 위의 내용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경쟁심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士大夫 계급이 자신의 노력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누리는 재화의 분배 몫은 미리 차등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공직자가 누리는 재화의 분배 몫이 미리 차등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거니와, 따라서 오늘날과의 차이는 農工商賈의 경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둘째 문단에서는 農工商賈의 경우, ⑤ '각자가 누리는 몫은 역시 限定되어 있다'고 하였다.<sup>38)</sup>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번 돈은 모두 자신이 쓸 수 있는바, 전통 유교는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sup>39)</sup>

37) '모든 公職은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전제가 바로 명분론의 골격인 것이다.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야말로 그 公職(이름)에 부여된 역할(몫)을 가장 잘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38) 이 '所享有限의 원칙'은 農工商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士大夫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士大夫들이 각자의 지위(品階)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몫을 미리 차등적으로 설정해둔 것 자체가 바로 '所享有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經國大典』에서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를 제한하고(戶典 <給造家地>), 각종 사치품의 소비를 제한한 것(『經國大典』 刑典 <禁制>) 등도 '所享有限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39) 전통 유교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인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자신이 쓸 수 없다고 하면,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④의 '각자 자신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던 것이다. 農工商賈에게 요구한 ④의 '각자 자신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은 士大夫에게 요구한 ②의 '각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기필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발적 賢能의 원칙'<sup>40)</sup>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명분론적 사회운영론의 세 축은 尊賢使能의 원칙, 所享有限의 원칙, 자발적 賢能의 원칙이다. '尊賢使能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원칙으로,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경쟁론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所享有限의 원칙'은 '각자가 누리는 재화의 몫'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회주의적 평등론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賢能의 원칙'은 명분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실 원칙이기보다는 덕목에 가까운 것이다. 이 원칙들은 명분사회의 成敗를 좌우하는 세 관건이었던바, 실제로 그에 따라 전통 유교사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것이다.<sup>41)</sup>

## 2. '제3의 길'로서의 명분론의 의의

앞에서 논의했듯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딜레마는 무엇보다도 자유

---

정하였다. 다만 아무리 자신이 축적한 富라 하여도, 그것을 바탕으로 사치와 방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40) '각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할 뿐 특정 지위를 두고 기필하지 않는다'는 말을 '尊賢使能'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해석하면, 남들이 높여주고(尊) 직책을 맡기지(使) 않아도 자신의 賢德과 才能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에는 '尊'과 '使'가 보장된 것이 아니며, '尊賢使能'에서 이 두 글자를 빼고, '자발적 賢能의 원칙'이라 명명한 것이다.

41) 이 세 원칙이 동시에 작동할 때 명분론에서 추구하는 '安分知足'이 본래의 취지를 다할 수 있다. '尊賢使能의 원칙'과 '所享有限의 원칙'이 작동해도 '자발적 賢能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安分知足'이란 '빈곤 속의 관념적 행복'이나 '빈곤 속의 체념'에 불과하게 된다.

와 평등의 길항관계에서 유래하는바, 따라서 근래에 회자되는 '제3의 길'은 결국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기심에 대한 처리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 추구한 자유는 '이기심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자유'였고, 사회주의에서 추구한 평등은 '이기심의 부정(극복)을 통한 평등'이었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본래 양면성을 지니는데, 자유주의는 그 긍정적 측면에 편중된 것이고, 사회주의는 그 부정적 측면에 편중된 것이다. 이와 달리 유교의 명분론은 이기심의 양면성을 균형있게 처리했던 것인바,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명분론이 지니는 의의를 논해 보자.

첫째, 자유주의가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에 편중된 것과 달리, 명분론은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을 함께 유의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기심이 지닌 자발성과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고, 예정조화라는 허구적 이론 속에 숨어 이기심이 야기하는 혼란을 외면했다. 그러나 정이천의 “後世에는 일반 선비로부터 公卿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尊榮에 뜻을 두고, 農工商賈는 날마다 富侈에 뜻을 두어, 億兆의 마음이 서로 이익을 두고 경쟁하여 天下가 어지러우니,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말에 보이듯이, 유교에서는 이기적 경쟁을 사회적 혼란의 근원으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경계했다.<sup>42)</sup> 그리하여 명분론에서는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재화의 몫을 선형적으로 설정해 둔 것인데, 이는 각자의 '욕망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安分知足을 유도한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가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에 편중된 것과 달리, 명분론은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을 함께 유의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기심이 초래하는 갈등을 혐오하여 이기심을 폄하하고, 그 대안으로 형제애를 강

42)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에서는 '道心의 명령 아래 人心을 추구하라'거나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막으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유교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人心'이라 하고, 그 가운데 특히 天理에 어긋나는 人心을 '人欲'이라 했다. 예컨대 배가 고파서 밥을 원하는 것 자체는 '人心'이요, 맛있는 밥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人欲'이라는 것이다).

조했다. 그러나 이기심을 부정할수록 자발성과 역동성도 함께 퇴조하여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되고, 형제애(사회권)를 강조할수록 개인의 자립심이 퇴조하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분론에서는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나 재화의 몫을 개인의 노력과 결부시킨 것이다.<sup>43)</sup> 이는 사회의 운영에 일정 부분 경쟁의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하게 사회의 활력을 복돋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명분론에 함축된 이기심에 대한 양면적 처방을 살펴보았거니와, 이렇게 본다면 명분론은 우리의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3의 길'이라 하겠다. 이제 명분론의 일반적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명분론은 '安分知足'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명분론은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을 넘보지 못하게 막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요,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을 수탈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大學』의 "처음 大夫가 되어 馬乘을 치는 사람은 닭과 돼지를 치지 않고, 卿大夫 이상의 얼음을 쳐서 쓰는 집안은 소와 양을 치지 않으며, 百乘의 집안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신하를 두지 않으니,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신하를 두려거든 차라리 자기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명분론은 위계의 차등을 중시하되, 분배에 있어서는 차등을 가급적 最小化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의 분배의 차등을 크게 할수록 계급갈등이 심화된다. 그리하여 유교에서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중시하였다.<sup>44)</sup> 『論語』의 "듣건대, '나

43) 유교의 尊賢使能論은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노력을 결부시킨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는 경쟁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유교는 '경쟁'에 대해서도 양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익, 『儒家社會哲學研究』, 심산, 2001, 453~465쪽 참조). 한편, 유교에서 각자가 누리는 재화의 몫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사치와 방탕을 막고자 한 것이었을 뿐, 각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재화를 분배한다는 논리가 아니었다.

44) 유교에서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은 陰陽思想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다. 易學에서는 음과 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서로

라와 가정을 둔 사람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고 하였다. 대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적은 것이 없으며, 안정되면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명분론에서 추구하는 위계질서는 上命下服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상이 먼저 下에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禮讓의 위계질서이며,<sup>45)</sup> ‘상이 먼저 下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率先垂範의 위계질서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계질서를 언급하면 곧 上命下服을 연상하나, 上命下服은 法家の 이론이었다. 유가의 이론은 禮讓(禮治)과 率先垂範(德治)이었는데, 명분론적 위계질서는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論語』의 “禮讓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나 “德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컨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 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명분론은 ‘사람들 사이의 호혜적 협력(감응)’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sup>46)</sup> 맹자는 “뻑뻑한 그물을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도끼를 때에 맞추어 山林에 넣으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다.”<sup>47)</sup>고 했다. 유교에서는 그물의 규격이나 伐木의 시기까지도 알맞게 규제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했다.

다섯째, 오늘날 지대한 관심사인 ‘福祉’ 문제에 대해, 명분론은 ‘가족의 주도’와 ‘국가의 보조’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복지를 ‘개인의

감응하여 生生을 지속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상층계급과 하층계급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서로 감응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45) 『禮記』 <曲禮上>에서는 禮의 본질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自卑而尊人)’으로 설명한 바 있다.

46)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제창한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하는 범세계적 생태계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다(『제3의 길』, 217쪽 참조).

47) 『孟子』 梁惠王上 3.



책임'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는 복지를 '사회(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개인책임론은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책임론은 도덕적 헤이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의 '가족주도' 모델은 복지에 대한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유교의 가족주도 사회복지 모델은 五倫 가운데 첫째 조목인 '父子有親'에 잘 나타나 있다. 『童蒙先習』에서는 "父子는 천성적으로 친한 관계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식은 부모를 받들어 계승하고 효도하여 부양한다."고 했는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慈愛와 자식의 부모에 대한 奉養을 통해서 아동과 노인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또한 父母에 대한 효도는 자연스럽게 兄弟 사이의 우애로 확대되기 마련인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은 자식들 사이의 우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매개로 해서 혈연관계가 확장되는바, 그리하여 친족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인척이나 외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 유교에서는 사망을 둘러보아도 친인척이 없는 鰥寡孤獨이나 한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廢疾者에게는 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하라고 했다. 『禮記』 <王制>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데도 부모가 없는 자를 '孤'라 하고,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를 '獨'이라 하며, 늙어서 아내가 없는 자를 '鰥'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를 '寡'라 한다. 이 네 부류는 하늘이 낸 백성으로서 곤궁하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 모두에게 일정한 양식을 제공한다.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다리가 끊긴 사람, 난쟁이, 百工에게는 각각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고, 먹인다.<sup>48)</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鰥寡孤獨을 '하늘이 낸 백성'이라 했는데, 이는 요즘 말로 '天賦人權'을 지닌 백성'이라는 뜻이다. 이들도 분명 생존과 복지

48) 『禮記』 <王制>.

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도, 곤궁하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으니,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또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을 맡기고, 먹여 살리라고 했다. 국가는 장애인들이 단순한 受惠者에 머물지 않도록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방도를 아울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9)</sup> 이렇게 본다면, 유교의 명분론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골고루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극진하게 배려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분론을 둘러싼 일반적 논점들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선, 명분론은 '불합리한 위계질서'를 옹호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먼저 확인할 것은, 위계질서는 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도 도처에 산재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국가의 통치와 사회의 운영에서 불평등한 위계질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문제는 그 위계질서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인바, '良·賤의 차별'과 '嫡·庶의 차별' 등 전근대사회의 신분차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명분론을 '신분차별의 정당화 논거'로 삼은 몰지각한 유림이 종종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論者は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분차별은 전근대사회의 일반적 관행으로서 유교가 특별히 신분차별을 옹호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유교의 근본 입장은 오히려 당시의 신분차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점이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孔子의 仲弓(雍)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출생신분은 비천하지만 인품이 매우 훌륭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출생신분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외면하자, 공자는 "일룩소의 새끼라 하더라도 붉고 뿔

49) 한편 宋代의 儒學者들은 '鄉約'과 '社倉'이라는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鄉村民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익, 『朱子學의 길』, 심산, 2007, 205~213쪽 참조). 鄉約과 社倉은 조선시대에도 광범하게 시행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 유교에서는 '가족 - 지역사회 - 국가'라는 3단계 복지체계를 추구한 것이다.

이 반듯하다면, 비록 사람들은 (출신이 卑賤하다고 하여) 祭物로 쓰지 않으려고 해도, 山川의 神은 그것을 버려두겠는가?<sup>50)</sup>라고 비판하고는, “雍은 王位에 앉힐 만하다<sup>51)</sup>고까지 극찬한 바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자는 당시의 불합리한 신분차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sup>52)</sup>

다음, 명분론은 구성원들의 安分知足을 핵심으로 삼는바, 이는 ‘사회적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명분론은 이기적 경쟁을 억제하는 체계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효율성과 안정성의 상호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sup>53)</sup> 그런데 이기적 경쟁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면에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맹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다투면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sup>54)</sup>고 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에서는 이기적 경쟁을 억제하는 명분론의 체계를 고안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安分知足을 추구하는 명분론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면에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論者は 자유와 평등이 서로 길항관계에 있듯이, 사회적 효율성과 안정성도 서로 길항관계에 있다고 본다.<sup>55)</sup> 그렇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

50) 『論語』 雍也 4.

51) 『論語』 雍也 1.

52) 많은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불합리한 신분차별이 고착된 사회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매우 달랐다. 한영우는 『朝鮮時代 身分史研究』(김문당, 1997)·『科擧,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 2013)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조선 시대는 누구나 學業만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매우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한영우에 의하면, 兩班이 권력을 독점했던 것은 조선 중기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초기와 후기에는 庶孽이나 賤民의 관직 진출이 놀라울 정도로 매우 활발했다.

53) 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을 ‘효율적 발전의 첩경’이라고 옹호하지만, 경쟁이 반드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은 “승자독식장이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을 끌어들이고, 비효율적인 소비와 투자를 조장하며, 우리의 문화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프랭크·쿡, 권영경·김양미 역, 『승자독식사회』, 웅진지식하우스, 2012, 39쪽 참조).

54) 『孟子』 梁惠王上 1.

시에 안정성도 극대화한다는 것은 본래 불가능한바, 그리하여 타협책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타협점은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성인가, 안정성인가?

주지하듯이, 기든스나 칼레츠키 등 오늘날의 지성들이 '제3의 길'을 제창한 근본 계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효율성만을 金科玉條로 숭상하는바, 그로 인해 심화되는 범지구적 양극화 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은 과연 어떤가?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놀라운 정도로 國富를 증진시켜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컬어진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일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시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 효율성이 아니라 안정성일 것이다. 오늘날의 時宜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유교의 명분론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효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시킨다고 옹호해야 마땅할 것이다.

#### IV. 결 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해서 논할 때 흔히 동원되는 개념의 틀은 '自由와 平等'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약간 차원을 달리 하여, '인간의 利己心에 대한 처리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55) 이는 사실 많은 학자들의 一般論이기도 하다(프랭크·쿡, 『승자독식사회』, 8쪽 참조).

이기심은 '자발성과 역동성'을 낳기도 하고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는바, 이처럼 이기심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만 주목하고 부정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이면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초래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이기심의 부정적 측면만 경계하고 긍정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평등한 복지를 실현했으나, 마침내는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양면적인 이기심'에 대한 '일면적 처방'에 치우쳤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에 못지않은 폐단을 야기했던바,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 識者들은 '제3의 길'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모색되는 '제3의 길'은 결국 이기심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제3의 길'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에 대한 양면적 처방'을 시도하는 것인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유교의 명분론을 고찰했다. 명분론적 사회운영론의 세 축은 尊賢使能의 원칙, 所享有限의 원칙, 자발적 賢能의 원칙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각각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尊賢使能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官職 등의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도덕성과 실무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尊賢使能論은 自由競爭論과는 본래 궤를 달리 하지만,<sup>56)</sup> 그 속에는 사실 경쟁론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최

56) 자유주의적 경쟁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반면에 유교에서는 특정한 이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尊賢使能의 원칙에 따라 통치자가 賢能한(최선을 다한) 사람을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賢能한 사람의 이익도 증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程伊川은 “君子는 일찍이 利를 바라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오로지 利로써 마음을 삼는다면 손해가 있게 된다. 오직 仁義를 추구하면 利를 추구하지 않아도 일찍이 이롭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고, 朱子는 “天理를 따르면 利를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롭지 않음이 없고, 人欲을 따르면 利를 추구해도 언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따른다.”고 했다(『孟子集註』 梁惠王上 1, 朱子註 참조).

선을 다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거니와, 이는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尊賢使能의 구체적 예로, 『書經』에서는 "(舜은) 3년마다 공직자들의 업적을 조사하였고, (9년에 걸쳐) 세 번 조사한 다음에는 업적이 훌륭한 자는 승진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는 축출하니, 여러 일들이 모두 잘 되었다."<sup>57)</sup>고 했는데, 그렇다면 尊賢使能은 '여러 일들이 모두 잘 되는' 결과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所享有限의 원칙은 각자가 누리는 '복지의 몫'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財貨의 소비는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所享有限論은 사회주의적 평등론과는 궤를 달리 하지만,<sup>58)</sup> 그 속에는 사실 평등론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제한을 받거니와, 이를 통해 각자가 누리는 몫이 보다 균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양극화(勝者獨食)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는 합의를 통해 최고상의 크기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참한 사회로 추락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합의는 더욱 평등한 동시에 번영하는 미래로 인도하는 열쇠이다."<sup>59)</sup>라고 호소하는데, 이는 所享有限論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자발적 賢能의 원칙은 명분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파한 것이다. 명분사회는 각자 자신의 본분에 힘쓰는 사회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사회가 아니다. 더군다나 所享有限의 원칙은 각자의 노력(성과)에 대한 보상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니, 따라서 명분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의 경우 때때로 그의 노력과 분배 몫이

57) 『書經』 虞書 舜典.

58) 사회주의적 평등론은 '弱者的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데 초점이 있지만, 所享有限論은 '상층계급의 사치와 방탕을 막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상층계급의 사치와 방탕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하층계급이 누릴 수 있는 재화의 몫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상층계급의 사치와 방탕을 막으면 결과적으로 하층계급이 누릴 수 있는 재화의 몫이 늘어나는 것이다.

59) 프랭크·쿡, 『승자독식사회』, 10쪽.

正比例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명분사회를 정체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발적 賢能의 원칙은 '어떤 사안이 자신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것인바, 이는 정체에 빠질 수 있는 명분사회를 건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덕목이었다.

자발적 賢能의 원칙은 근원적으로 일정한 '깨달음'에 의존한다. 크게는 四海가 同胞요 萬物이 一體라는 깨달음, 작게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가 共同運命體라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 헌신에 속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없으면 기꺼이 헌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부단히 '道에 대한 깨달음'과 '克己復禮의 修身'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는 일정한 깨달음에 의한 인격의 고양 없이는 어떤 사회적 이상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sup>60)</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소개하면서 본고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財産의 분배가 불평등할 때에는 대중은 혁명적이 되며, 官職의 분배가 평등할 때는 지식층이 혁명적이 된다.<sup>61)</sup>

※ 이 논문은 2014년 2월 3일에 투고되어, 2014년 2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특별논문'으로 선정하고, 2014년 2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60) 구성원들의 인격의 고양 없이는 어떤 사회적 이상도 성취할 수 없는 까닭은, 아무리 法과 制度를 훌륭하게 만들어도 구성원들이 그것을 악용하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61) 아리스토텔레스, 나종일 역, 『정치학』, 삼성출판사, 1999, 89쪽(1266b).

<참고 문헌>

- 『周易傳義大全』, 『書經』, 『禮記』, 『四書集註』, 『經國大典』, 『童蒙先習』  
박순성,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3.
- 이상익, 『歷史哲學과 易學思想』, 성균관대출판부, 1996.
- 이상익, 『儒家社會哲學研究』, 심산, 2001.
- 이상익, 『朱子學의 길』, 심산, 2007.
- 조공호,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 한영우,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집문당, 1997.
- 한영우, 『科擧, 출세의 사다리』, 지식산업사, 2013.
- 로버트 액셀로드, 이정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12.
- 로버트 프랭크·필립 쿡, 권영경·김양미 역, 『승자독식사회』, 응진지식하  
우스, 2012.
- 버나드 맨더빌, 최윤재 역, 『꿀벌의 우화 :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문  
예출판사, 2011.
- 브로노프스키·매즐리슈, 차하순 역, 『西洋의 知的 傳統』, 흥성사, 1983.
- 아리스토텔레스, 나종일 역, 『정치학』, 삼성출판사, 1999.
-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國富論』, 동아출판사, 1993.
- 앤소니 기든스, 김현옥 역,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공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9.
-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2007.
- 아나톨 칼레츠키, 위선주 역, 『자본주의 4.0』, 컬쳐엔스토리, 2011.
- 크레인 브린튼, 崔明官·朴恩駒 역, 『西洋思想의 歷史』, 을유문화사, 1984.
-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L. A. Selby-Big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 Harper & Row, Publishers. 1976.
-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The Second Treatises of Government)* in *Political*



*Writings*, Penguin Books, London, 1993.

John Stuart Mill, *On Liberty*, edited by Elizabeth Rapaport,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Indianapolis, 1979.

Thomas Hobbes, *Leviathan*,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C.B. Macpherson, Penguin Books, London, 1985.

## Abstract

*On the Limits of Western Modern Economic Ideologies & the Reillumination  
about Confucian Right Name Theory / Lee Sangik*

Generally speaking, egoism has two sides. On the one hand egoism raises social utility by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egoism deepens social conflicts by competition too. But liberalism gives attention to the positive side of egoism, and overlooks the negative side of egoism. On the contrary, socialism gives attention to the negative side of egoism, and overlooks the positive side of egoism. Like this, liberalism & socialism make out one side prescription about two sides of egoism. So they raise many evils no less than many merits equally. In this reason, some scholars propose the Third Way at last.

Confucian Right Name Theory is composed by three principles. The first is the principle of respect the wise and engage the able.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obtain a social position. It means that social position like an official post must be distributed according to one's morality and ability.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limitation one's enjoy.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social welfare. It means that the consumption of goods must be limited properly.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voluntary ability. This principle is related to everyone's mind. It means that everyone should do his best although it has no relation with his profit. Perhaps we are able to speak that this three principles which plan two sides prescription about egoism are the standard case of the Third Way.

Key words: liberalism, socialism, the Third Way, Confucianism, Confucian right name theory(名分論)